
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

- 5대 신규과제 중심 -

2019. 3. 7



금융위원회



목 차



[과제1]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	1
[과제2] 고령자·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 포용성 강화	2
[과제3]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	3
[과제4]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	4
[과제5]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·대응체계 구축	5

[과제1]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

◆ 금융회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역동적인 금융시장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혁신하고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개선

- **(영업 자율성 확대)** 금융시장이 환경변화, 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도한 상품·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
 - 4차산업혁명·고령화·비대면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규제개선 추진
 - * (보험업)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지원 허용 등 규제완화
 - (카드업)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
 - (신탁업) 영상통화를 활용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허용
 -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‘원칙중심, 사후규제 강화’로 전환
 - * (금투업) 정보교류차단장치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관련 시장교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
 - (리스업) 부동산리스업 취급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취급한도 및 업종에 제한
 - 금융권 업무위탁을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, 금융회사 부수·겸영업무 허용절차 간소화 (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)
 -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규제 완화
 - * (상품다양화) 위클리옵션, 국채스프레드(10년물-3년물)거래 등 다양한 상품군 마련
 - (규제완화) 증권사가 Index를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
 -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장 자율성을 제약하는 자산운용산업의 규제를 개선
 - * 펀드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선,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규제 완화 등
- **(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 개선)** 그림자규제나 과도한 검사·제재가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혁신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괄정비
 - (그림자규제 정비) 행정지도(39건), 모범규준(280여건)을 전수점검하고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법규화·폐지 등 추진
 - (검사·제재 혁신)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, ‘핵심부문* 취약점 진단 - 개선유도’ 방식을 통해 검사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경감
 - * 금융소비자 보호(불건전 영업행위, 불완전 판매), 내부통제(준법경영, 금융사고 예방) 등
 - 신종 조치수단(준법교육 대체 등)을 활성화하고,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(고의·중과실 제외)은 면책·감경 적극 고려

[과제2] **고령자·청년 등 맞춤형 지원**으로 금융의 포용성 강화

◆ **고령층·청년층 등 그동안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계층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**

- **(주택연금 활성화)** 고령화에 대응하여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확충, 비용경감 등 제도개선 추진
 -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고,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
 - 가입자 사망시 (자녀동의 없이도)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개선
 - 가입주택의 임대(전세·반전세)를 허용하여,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·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지원
- **(전·월세 보증지원)** 청년층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·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 「전·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」 마련
 - 청년층의 주거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·월세 보증금, 월세자금,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총 1.1조원(약 3.3만명) 공급
 - * 주금공 보증을 통해 금리 2%대의 ①소액보증금 대출(최대 7천만원), ②월세자금 대출(최대 월 50만원, 총 1,200만원 한도), ③기존 전·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
- **(금융접근성 제고)**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노력 지속
 -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고령층·장애인의 휴면재산 찾기 지원 추진
 - 고령층이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에 '계약사실 알림' 서비스 제공
 - 은행 방문시 직원 도움벨(Help Bell) 설치, 콜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
- **(맞춤형 금융교육)** 금융이해력이 낮은 고령층과 청년층에 교육역량 집중
 - 금융가이드북(고령층), 웹툰(청년) 등 수요자 맞춤형 교재 개발·제공
 -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SNS채널(네이버, 유튜브 등) 개설·운영을 통한 교육콘텐츠 배포

[과제3]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권의 제고

◆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불편함, 불합리함을 적극적으로 발굴·개선하여 '체감할 수 있는' 금융소비자보호 제공

□ **(보험약관)**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*이 지속 발생하는 보험 약관의 작성·검증·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및 신뢰 제고

* ①보험약관의 오류 발생(자살보험금), ②내용이 복잡하고 난해(즉시연금), ③변화된 의료환경 예측불가(암보험) 등의 사유로 분쟁 지속

○ 약관 작성·평가시 소비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□ **(채권추심)**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 제도 정비

○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, 무분별한 시효 연장 등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권의 책임성 제고

* 관계기관 합동 TF구성·운영 → 신용정보법, 대부업법 등에 산재된 채권추심업자 규율체계 개선 등 추진

□ **(계좌이동 서비스 확대)**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,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,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·카드변경이 가능토록 개선

○ 저축은행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단위 농·수협,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'계좌이동 서비스(페이인포)' 도입('19.下)

※ 은행-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개시('20년)

○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('19년)하고, 필요시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('20년)할 수 있는 '카드이동 서비스' 도입

□ **(대출 편의 제고)**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, 타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(금리·한도 등 유리)할 수 있도록 지원('19년말)

*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,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(어카운트인포)을 통해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·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[과제4]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

◆ 기업 회계·공시제도 개선,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

- (회계개혁 정착 및 감독 선진화)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, 감독방식도 사전 예방·지도 중심으로 전환
 -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*,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제 등을 통해 외부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
 - * 금년 10월부터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약 220개사를 지정할 예정
 - 재무제표 심사* 제도(4.1일 시행)를 통해 상장사 감리주기(25년, '16년)를 대폭 단축하고, 회계정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정정을 유도
 - *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
 - 회계처리기준의 해석·적용방법 및 감독지침 제공을 확대하고, 제재양정기준을 합리화*하여 제재의 징벌력 및 순응도를 제고
 - * 중과실 판단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,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
 - 과도한 감사보수나 외부용역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에도 적극 대응
- (공시정보의 충실성·적시성 제고) 투자자의 기업가치 판단요소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시제도를 개선
 -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, 공시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*, 노동·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(ESG) 정보의 공시 확대
 - * 금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
 -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*한 기업의 명단 공개,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있고 성실한 정보전달 유도
 - * (예) 명절·연말 증시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 '올빼미 공시'
 - 대량보유 공시제도(5%룰) 개선,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 (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, 연중)
- (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)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 마련, 전통적 불공정거래*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등을 통해 신속·엄정 처벌
 - * 현재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(미공개 정보이용, 시세조종 등)에 대해서는 형벌 부과만 가능

[과제5] **확고한 금융안정**을 위한 점검·대응체계 구축

◆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,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·관리하여 **금융 정책 추진의 기반**이 되는 **금융안정 체계**를 확고하게 유지

□ (가계부채 관리 강화)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%대로 억제

- 은행권('18.10월)에 이어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(2분기)
 - 가계·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'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' 도입(추가 자본적립 의무부과)
-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

* ①월상환액 고정(최대 10년), 금리상승폭 제한(5년간 2%p) 상품 개발, ②금융권 공동 '매각후 재임대(SLB) 프로그램' 도입, ③고정금리·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

□ (부실채권시장 정비) 경기악화에 대응하여 부실채권(NPL)시장 수요 기반 확충 및 기업회생채권을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

- 시장성숙도를 고려하여 유암코의 역할 재정립 등 검토, 캠프코의 NPL펀드 투자확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자의 수요저변 확대
- 정책금융기관과 협조를 통해 기업회생채권 정보교류 및 중개 활성화, 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 추진

□ (금융회사 정리제도) 국내 대형은행(D-SIB)을 '시스템적 중요 금융 기관'으로 선정하고 회생·정리계획을 사전에 수립(금산법 개정 추진)

* 회생·정리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재부·한은·금감원·예보 등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위기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

□ (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) 급성장하고 있는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여건을 감안한 규제·관리체계 구축

- 익일물에 편중된 RP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기일물 확대,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한 담보증거금율(헤어컷) 차등화 등 추진
-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금융업권이나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·요구할 수 있는 '거시건전성 관리조치' 제도 도입 추진